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축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대학과 연구소, 기업,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뤄 낸 230여 건의 혁신 우수 사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계속하다 보면 혁신할 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수준 높은 혁신이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혁신은 끝이 없이 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혁신 사례들도 어느 것 하나 거저 얻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해서 해법을 찾아 내는 혁신리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모범을 보여 주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혁신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것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미래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전략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돈과 자원을 내려 보내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 예산 모두 지방, 지방대학, 지방중소기업을 먼저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제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왔습니다.

먼저, 지역 혁신의 토대가 되는 지식기반 구축과 혁신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만 보더라도 연평균 26.5%씩 늘려 왔습니다. 금액으로는 지난 4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1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누리사업과 산학협력 중심 대학 육성 등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역의 산업도 혁신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신활력사업, 차별화된 전략에 맞추어 새롭게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해 2004년에 신설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규모가 매년 늘어서 올해에는 6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2002년 3,500개이던 지방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올해는 9,400개로 2.7배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전에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순수입 인구도 2002년 21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1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지역 주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복도시 기공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이 있었고, 내일은 태안 기업도시가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와 생활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것이 제2 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한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이 위축되거나 뒷걸음질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잘 갈 수 있을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이 달려 있습니다.

앞서 영상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역발전정책은 가짓수도 많고 복잡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정책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역 발전의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계신 여러분이 개별 정책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과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를 막아 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자율화라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름은 대학자율이지만 내용은 본고사를 부활하고 내신반영비율을 마음대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다시 입시지옥에 내몰리게 됩니다. 특목고와 수도권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대학입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고사 부활에 대한 주장과 지지 여론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철회했다고 들었습

니다만,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방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거의 모든 정책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하나하나 잘 따져 보시고 균형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틀 속에 수도권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북아 비즈니스·금융 허브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 투자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전자·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발전 덕분에 1997년에 잠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삼성전자 공장 증설, 2005년 LG필립스 파주공장 신축, 2006년 LG전자, 팬택 등 4개 대기업 공장 증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 지역에 대해서 61개 첨단 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에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방이 용인해 주지 않았다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용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규제 완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5년 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라서 지방과 수도권이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 지방이 이와 같은 결정을 묵시적으로나마 수용해 준 것은 지

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가까이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멀리 내다보면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자세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손잡고 상생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수도권도 지방도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최상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반드시 지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다 함께 수준 높은 삶을 누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설명하신 분들도 그리고 제 연설 속에서도 균형발전을 경쟁력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국민들의 뜻이 서로 맞고, 손발이 맞고, 그래서 국가가 통합이 됐을 때 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경쟁력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왜 필요합니까? 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이 더불어 잘 살자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정책 전반에 있어서 균형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정책입니다. '함께 가자.' 이 가치를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연설 원고에 없는 얘기까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 보도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선거 시기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제대로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정당에 몸 담고 있거나 또는 정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 그 정당 내에서 균형발전정책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람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